

사회혁신포커스

Social Innovation Focus

시사적인 사회혁신 쟁점을 일상적으로 포착하고
비평하는 주간 이슈페이퍼입니다

14호 2016.07.07

'불안의 극복', '시스템 전환', '회복력 강화'로서의 사회혁신

이승원 · 사회혁신리서치랩 연구소장

요약

지난 20여 년 간 새로운 시도들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 구조화된 깊고 다양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어왔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사각지대에 처한 시민적 필요(needs)를 드러내고, 그 필요를 해결할 공통자원(common)을 생산하거나 동원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의 시도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상처와 불안을 치유하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연대의 원칙 속에서 사회적으로 전개되는 활동을 사회혁신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사회혁신이 상처, 불안, 사회문제를 반복해서 양산하는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소중한 사회혁신 결과들이 단편적·소모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오랜 시간 공유될 수 있다. 회복력은 바로 시스템의 작동 공학에 대한 익숙함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성찰적이고 혁신적인 전환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회복력 강화·사회혁신은 반복되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시스템을 복구 또는 재구성하는 것이며, 그 회복력의 의미는 '숲'에 '수 천 가지'나 있다. 시민의 숲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 다양한 현장에서 서로 다른 시간을 거쳐 성장한 사회혁신 주체들이 서로의 자양분이 되면서 존엄한 공존을 회복해 나가는 사회혁신의 꾸준한 걸음을 요청한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혁신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도 이 바람의 영향권에 깊이 들어와 있다. 전통적 노동운동과 정치 민주화운동, 그리고 199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신사회운동은 2000년대 들어와 사회혁신 바람과 조용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혁신이라는 바람의 진원지는 어디이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 사회혁신의 역사적 맥락

1980년대 말까지 한국의 시민사회는 약한 수준이었다. 이 조건에서 양적 성장 중심 개발독재가 초래한 정치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주로 노동운동과 정치 민주화운동이 감당했다. 1987년 이후 제도적 민주화가 정착되면서 환경, 여성, 빈민, 장애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들이 확산되었다. 이 운동들은 ‘신사회운동’이라 불리었다. 노동계급 중심과 전위주의가 지배했던 전통적 노동·민주화 운동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아래로부터의 풀뿌리(grassroots) 운동이었다.

1980년대 초반 영국의 대처리즘(Thatcherism)과 함께 신자유주의가 시작되었고, 1980년대 말 신자유주의는 현실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함께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었다(neoliberal globalization). 1997년 IMF 금융위기와 함께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 전 영역을 지배하면서 우리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가’의 역할이 신자유주의 무게 아래에서 변화를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핵심은 ‘시장’과 ‘자본’이라는 비인간적 관계의 극단적 자유(탈규제)이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변형된 경제적 자유주의로 대체했다. 따라서 IMF, WTO, FTA, 초국적 기업 등으로 드러나는 신자유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계약론적 의무를 지닌 근대 국가(혹은 정부)의 역할을 약화시키게 된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국가가 자본시장 확장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점차 시민권과 공적 영역을 위한 공화주의적 경계를 허물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미 1990년대 이러한 현상을 스테픈 길(Stephen Gill)은 ‘신입헌주의(New Constitutionalism)’¹⁾라 하고, 로버트 콕스(Robert Cox)는 ‘국가의 국제화(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state)’²⁾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신자유주의적 노동분업질서 재편과 함께 임금감소, 고용불안, 이주노동자 인권문제, 신보수주의 강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영국의 EU탈퇴 결정(Brexit)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기존 정치사회적 운동들은 변화된 모든 상황들에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그 한계로 인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혁신 접근이 부상했다.

이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인식은 사회혁신 주제, 대상, 목표를 정의하는 핵심이다. 지금까지 사회혁신에 대한 많은 정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국가(혹은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이 두 주체의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적 문제와 시민적 필요를 시민사회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또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의에서 멈추면,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는 수많은 사회혁신 시도들이 임시 봉합에 머무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문제를 반복해서 발생시키는 모체 또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혁신적 대응이 없으면, 오히려 그 시스템의 고착화에 기여하고, 우리도 그 속에 길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혁신, ICT 기반 디지털 혁신도 그 혁신적 가능성과 달리 오히려 우리가 당면한 사회문제와 위기를 임시 봉합하고 그 위기의 모체를 유지하는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인 OECD 최고의 자살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들의 희생, 혐오·보복형 범죄의 확산, 공적 영역의 사영화(privatization)에 따른 공공성 및 사회 안전망의 붕괴, 경쟁 중심 교육과 기업형 자기계발이 만든 인간성 파괴와 공동체적 가치의 붕괴, 소비주의 심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생애 주기의 악화, 성장주의가 초래한 생태적 위기 등 새롭게 구조화된 사회문제들은 결코 임시 봉합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이 위기에 대한 부정적 대응방식으로 나타나는 극단적 민족주의·국가주의나 테러담론화된 전쟁과 평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안’, 그에 대응하는 ‘회복력’

이 문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려면 이 문제들이 엮어진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이 새로운 사회문제들은 ‘불안’을 사회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생산과 소비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불안의 출현은 두 축에서 찾을 수 있다. 한 축은 우리가 처한 사회문제 진원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예측가능한 분석이 힘들어졌다는 사실이다. 다른 한 축은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온 전통적 주체들(정부, 의회, 노동운동, 신사회운동)의 자기존재 기반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예측불가능성과 전통적 주체성의 약화, 여전히 신자유주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공포 영화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자. 공포영화의 플롯은 기본적으로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처음 단계는 어떤 낯선 현상의 원인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공포이다. 그 공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전개된다. 이 단계에서는 그 공포의 원인·주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공포가 발생한다. 오늘날 구조화된 사회적 불안도 마찬가지이다. 매 시간 1-2명의 생계형 자살이 발생하고, 삶의 곳곳에서 안전문제나 혐오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해고되거나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비극적 현실에서 불안은 커져간다. 오늘날 교육은 곧 불안 그 자체이다.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나 재난에 따른 원전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구조화된 사회적 불안의 한 측면이다. 이 모든 것이 정치경제적 구조 때문이라는 결론은 오히려 다른 삶의 대안 없는 고립된 개인을 더 깊은 불안에 빠뜨리게 된다.

가능성과 희망이 아니라 불안이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다. 오늘날 다양한 불안의 원인들은 주체성의 상실과 모욕적 삶으로 이어진다.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에 최적화되고, 그 속에서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노동과 자기계발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 자기의지에 따른 과잉노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피해도 자기가 떠맡아야 한다. ‘피로사회’의 핵심이자, 오늘날 우리의 노동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³⁾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안은 우리 근대화 과정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장 짙은 한국 근대화의 특징을 ‘근대국가 형성’, ‘산업화’, ‘민주화’라는 세 과제가 동시에 그리고 빠르고 압축적으로 진행된 것에서 찾고 있다.⁴⁾ 반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수백 년 이어진 갈등과 성찰, 변화의 시간을 겪으며 스스로 회복력(혹은 회복탄력성: resilience)을 강화시켜왔다.

회복력이란 ‘외부의 위기와 위협, 압박에 대해 고무공처럼 튀어 올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키는 심리학 개념’이자, ‘어떤 시스템이 견뎌낼 수 있는 변화의 정도(외부의 교란들을 흡수해낼 수 있는 시스템의 역량)’이다. 이 때 이 시스템은 ‘핵심적인 기능, 구조, 피드백 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회복력은 다양성, 모듈화, 사회적 자본, 혁신, 피드백 루프의 조직화, 중첩성, 생태계 서비스라는 7개 핵심원리를 구성하며, ‘공유재(공통자원)의 확보’, ‘민주주의의 재창출’, ‘사회연대경제의 구축’, ‘인류와 지구의 문제에 대한 가치 측정’이라는 4개 추진전략을 포함한다.⁵⁾

이와 달리, 동시적이고 빠른 근대화를 겪은 우리는 권위적이고 획일적 동원 속에서 회복력을 키울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 마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기조차 치명적이듯, 회복력이 약한 사회에서 불안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불안은 공시적이지 통시적인 구조이며, 우리 사회혁신은 이 두 가지 모두 고려하면서 ‘회복력의 회복’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야만 위기에 대한 임시 봉합적 대응이 아니라 극복이 가능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과 사상적·실천적 배경들

지난 20여 년 간 새로운 시도들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 구조화된 깊고 다양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어왔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사각지대에 처한 시민적 필요(needs)를 드러내고, 그 필요를 해결할 공통자원(communs)을 생산하거나 동원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의 시도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상처와 불안을 치유하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연대의 원칙 속에서 사회적으로 전개되는 활동을 사회혁신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인생이모작, 청년활동, 로컬푸드, 도시농업, 공유경제 등으로 잠정 분류된 사회혁신 시도들이 지난 십여 년간 급속히 성장했으며, 노동, 예방의학, 생활안전, 생태적 전환, 메이커 무브먼트, 대안교육 등이 함께 사회혁신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사회혁신 기류 속에는 국가-자본-노동의 근대적 관계와 의미를 자율적인 생산적 탈성장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앙드레 고르(André Gorz)의 철학적 성찰이 하나의 고기압을 형성한다. 그보다 오래 전 영국 수평파 내 디거스(Diggers)들이나 로버트 오언(Robert Owen)의 공동체운동, 로체데일 협동조합운동의 경험도 또 다른 고기압이다.

후기산업사회 이후 이탈리아 볼로냐, 스페인 몬드라곤, 캐나다 퀘벡 등에서 지속되는 협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 모델, 나아가 서울, 옥천, 원주, 완주를 포함 한국과 세계 전역에서 전개되는 탈소비운동, 공동 수로·공동 소유 주택 프로그램, 화폐 없는 교환경제, 협업적 제작실험, 기본소득, 로컬푸드, 도시농업, 주민회의 등은 사회혁신의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2009년 영국 지속가능개발위원회 경제위원이었던 팀 잭슨(Tim Jackson)은 GDP중

심 양적 경제성장이 인류의 생존·번영과 관련없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 공동체 관계망과 신뢰의 공고함, 직업의 만족감, 사회적 참여, 한정된 지구의 생태적 한계 내에서의 삶을 포괄하는 ‘번영 (prosperity)’의 개념을 재정립하기도 한다.⁶⁾

불안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혁신은 그 구조의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엉뚱하거나, 급진적이거나 창의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혁신이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구조가 제한하는 관계에서만 진행되는 활동이 아니라, 그 제한에서 벗어나 구조를 재구성하려는 다양한 실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실험은 낯설 수 있지만, 이 낯설음은 불안이 아니라 설렘이다. 불안 구조를 유지하는 기존 제도적 권위체들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상황에서 사회혁신은 더 자율적이고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회혁신에 관한 몇 가지 근본적 질문들

신자유주의라는 외적 불안 구조와 약한 회복력이라는 내적 불안 구조는 사회혁신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사회에 던지도록 한다.

-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과 구조화된 사회적 불안은 어디에서 발생했으며, 국가와 시장은 이 발생의 책임이 없는가?
- 국가-시장-시민사회의 현재 시스템을 규정하는 신자유주의는 이 난제 그리고 불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난제와 불안을 임시 봉합이 아닌 극복하기 위해 사회혁신 주체들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
- 사회혁신은 자유와 평등의 끊임없는 확장이라는 민주주의 과제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 근본적 문제제기는 시스템이 현재 위기들을 반복하지 않는 수준으로 회복력을 되찾거나 그렇게 재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혁신의 방향제시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와 시장에 위기의 책임이 있다면, 예를 들어 ‘정부-중간지원조직-활동가-현장’ 관계 또는 민관관계에서 갑으로서의 정부역할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사영화·상품화’와 ‘탈규제’를 원칙으로 삼는 시장도 그 원칙을 심각하게 재고려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사회적 위기와 불안의 구조적 원인이라면, 국가는 시장과 시민사이

‘신자유주의 전달벨트’와 ‘신보수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효과에서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보다 강력히 요구받을 것이다.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TINA)’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오늘날 수많은 사회혁신 시도들과 함께 ‘대안은 수천 가지나 있다(There are thousands of alternatives: TATA)’로 응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과제와 관련해서, 그에 반대되는 권위적 사회혁신이란 ‘등근 네모’와 같다. 단어 조합은 가능하지만 현실화될 수는 없다. 사회혁신은 민주주의가 모체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사각지대 속 시민적 필요를 의제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인위적 차별이나 윤리적 편견을 넘어서 모든 이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사회혁신 주체가 될 수 있다.

사회혁신 결과로 만들어진 공동체·마을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자유와 평등의 지속적 확장을 통해 특권적 집단의 폐쇄 공간이 아닌 모든 이들이 서로의 삶의 기반이자 가치가 될 수 있는 포용적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다. “내 삶의 문제는 장애가 아니라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건물이다”라는 호주 코미디언 스텔라 영의 표현처럼, 우리의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정상’이라 불리는 집단이외에는 열리지 않는 특수한 대문을 가진 마을·공동체의 가려진 야만성일 것이다.

이는 또한 사회혁신의 주체가 특권적 집단이 아니라, 공존과 존엄의 가치와 협력과 연대에 동의한 모든 이들임을 분명히 하며, 어떤 차별이나 배제도 주체의 성격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민주적으로 열려있고 포용적 공간일 때 자유로운 예술, 인문학적 상상 그리고 보편적 디자인이 결합될 수 있고, 다양한 대안적 삶들이 공존할 수 있다.

시스템 전환가능성, 관계의 근본적 성격전환 그리고 사회혁신

이러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병행될 때, 소중한 사회혁신 결과들이 단편적·소모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외부충격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오랜 시간 공유될 수 있다. 회복력은 바로 시스템의 작동 공학에 대한 익숙함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성찰적이고 혁신적인 전환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혁신이 회복력의 강화, 즉 시스템 전환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은 관계의 근본적 성격전환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는 이미 정치영역에서 전통적 정당정치-사회운동 공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적어도 자스민 혁명이라 불리는 아랍의 봄에

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진행되는 사회영역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경제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수직적 관계들이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도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어 나간다.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면서 전환된 새로운 관계는 시스템 자체의 전환가능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치, 경제, 사회라는 근대적 분류도 해체되고 있다. 사회혁신 현장들에서 이미 근대적 분류가 오히려 사람들의 욕망과 역동성을 묶는 사슬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젠트리피케이션’, ‘위기 청소년’, ‘가계부채’, ‘생태적 전환’ 등은 각각 분리된 채 부동산, 교육, 경제, 환경친화 정책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난제들이다. 문제에 대한 대응이 복합적이며 협력적이어야 하듯, 모든 관계가 유기적으로 얽혀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어 시스템 자체가 회복력을 강화시킬 때 비로소 난제들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전환되는 시스템과 사회적 관계가 강한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 지표는 GDP, 일자리/창업 수 증가, 시장규모 확장 등 성장 중심 수치증가가 아니다. 그 지표는 사회문제들을 가리키는 부정적 수치들의 감소와 새로운 사회혁신 의제 수 증가로 먼저 이어져야 한다. 이어서 그 지표가 가리키는 사회혁신의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 우선 사회혁신 주체 발굴과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 주체들과 함께 사회혁신 결과와 의제들을 보다 많은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서울도 이 흐름을 밟고 있다. 서울시의 사회혁신 1기 키워드는 ‘현장성’이다. 현장에 답이 있기에 사회혁신 의제와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현장성의 핵심내용이다. 위기의 현장을 좋은 토양으로 역전시켜 오히려 사회혁신 주체가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하면서 현장의 회복력을 강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현장성의 핵심목표이다.

서울시의 사회혁신 2기 키워드는 ‘확산’이다. 현장에서 성장한 주체가 찾은 답을 시민들이 공유하면서 ‘사회혁신 확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즉 회복력을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목표이다. 사회혁신 주체라는 나무들이 모여 시민의 숲을 이루는 것이다. 국가 단위의 제약을 벗어나 지역, 도시, 사회적 과제별로 국내외 사회혁신 주체들이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만들면서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것도 불안을 극복하고 좋은 회복력을 유지하는 글로벌 시민의 숲을 형성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수많은 대안들과 ‘시민의 숲’

숲은 불안을 극복하는 최선의 상태이다. 사회가 시민의 숲으로 전환되는 것이 구조화된 사회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혁신의 목표이다. 자연의 숲이 그렇듯, 시민의 숲에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특권적 주체나 절대중심이 사회혁신 방법, 속도, 목표를 획일화시켜서는 안 된다.

숲에서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고유한 생애주기 속에서 필요한 시간을 보낸다. 서로의 시간을 침해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를 강요하지 않는다. 침해하고 강요할 경우, 그것은 오히려 자연의 생태계를 깨뜨린다. 각각의 시간은 각각의 존엄한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생명체들은 다른 생명체들의 자양분이 되고, 그렇게 따로 또 같이 유기적 관계를 유지한다. 자양분을 공유하면서 서로 존재기반이자 존재의 의미가 된다. 자연의 연대이자 협력이다.

각자의 존엄한 시간과 서로의 자양분이 되는 이 공존 방식이 거대한 숲을 이루면서 숲은 최상의 회복력을 유지한다. 타인이 경쟁과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존재조건이자 이유가 된다. 이렇듯 사회혁신이 일구는 시민의 숲은 호흡과 침, 풍요로움과 안전, 자족과 회복이 가능한 존엄한 공존의 상태이다. 이반 일리치(Ivan Illich)가 인류를 구할 공생의 도구로 도서관, 자전거와 함께 첫 번째로 숲을 제시한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시민의 숲 서울’은 서울형 사회혁신 2기의 목표인 ‘사회혁신 확산 시스템 구축’의 은유적 표현이자 가치와 상상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회복력 강화 사회혁신은 반복되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시스템을 복구 또는 재구성하는 것이며, 그 회복력의 의미는 ‘숲’에 ‘수 천 가지’나 있다. 시민의 숲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 다양한 현장에서 서로 다른 시간을 거쳐 성장한 사회혁신 주체들이 서로의 자양분이 되면서 존엄한 공존을 회복해 나가는 사회혁신의 꾸준한 걸음을 요청한다.

- 1) ‘신입헌주의’란 주로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각 국의 공적 영역에서 추구하는 본질과 목적이 지구화의 원칙에 따라 보다 사영화되고 상업화되는 방식으로 다시 정의되는 거시정치적 과정이다(Gill, 1995 b: 412.). 즉 신입헌주의는 국가가 통치세력과 자본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를 제한하고 사회적 공공선의 확대를 위한 자신의 의무를 축소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신입헌주의는 지구화에 편승하는 국가들이 지구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일상이 점차 악화되면서 발생하는 정치 사회적 저항으로부터 특권집단의 사영화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제도를 통제하는 제반 입법, 행정적 정책추진을 포함한다(Gill, 1995a: 78-81; 1995b: 413).
- 2) ‘국가의 국제화’란 일국차원에서 국가가 정책 결정 및 집행에서 국내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 초국적 기업과 국제 자본주의적 생산을 위해 국가의 정책과 집행 형태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국제화는 국가 간 수직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국 내 사회집단의 강력한 저항을 촉발하게 된다(Cox, 1987: 253).

참고자료

- Cox, R., 1994, 'Global structuring: Making sense of the changing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 Stubbs, Richard., and Underhill, Geoffrey R. D. (ed.), Political Economy and the changing global order, London: Macmillan.
- 1987, Production, Power and World order: Social Forces in the Making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ill, Stephen. (1995 a) 'Theorising the Interregnum: The Double Movement and Global Politics in the 1990s' in Hettne, Bjorn (e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Understanding Global Disorder, London: Zed Books.
- 1995 b, 'Globalisation, Market civilisation, and Disciplinary Neoliberalism',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4., no. 3., pp.399 - 423.
- 김병권, 2015, “서울형 사회혁신 2.0 추진 전략 및 의제화 방안 연구”, working paper, 서울연구원
- 마이클 루이스, 팻 코너티, 2015,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 미래가치와 리질리언스 포럼 옮김, 서울: 따비
- 송위진, 2016, “혁신연구와 ‘사회혁신론’, 동향과 이슈, 2016.7.4.제27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최장집, 1998,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남
- 스페냐 플라스펠러, 2013, 「우리의 노동은 왜 우울한가」, 장혜경 옮김, 서울: 로도스
- 팀 잭슨, 「성장없는 번영」, 전광철 옮김, 서울: 착한 책가게
- 한병철, 2012, 「피로사회」, 김태환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3) 한병철, 2012, 「피로사회」, 김태환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스페냐 플라스펠러, 2013, 「우리의 노동은 왜 우울한가」, 장혜경 옮김, 서울: 로도스
 4) 최장집, 1998,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남
 5) 마이클 루이스, 팻 코너티, 2015,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 미래가치와 리질리언스 포럼 옮김, 서울: 따비
 6) 팀 잭슨, 「성장없는 번영」, 전광철 옮김, 서울: 착한 책가게